

화요일



황수주

북구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아침 등교시간이 8시까지, 1교시 수업시간은 8시 40분입니다. 등교시간이 너무 빨라요.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 교육활동은 예체능이 아닌 이상 거의 무조건 의무입니다. 야자와 방과후는 제 진로와는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제 꿈을 포기할 지경입니다.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이 자포자기하고 싶고 너무 괴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학교에 등교해서 10시까지 남아야 하는 게 너무 슬프습니다.”

“방과후, 야자 둘 다 의무예요. 학습공간에 따라서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듯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도무지 집중이 안 돼서 미처버릴 거 같아요. 오히려 스터디카페 이런 데가 더 집중 잘 돼요. 학교에서 저희들을 강제로 묶어두니 감옥이 따로 없어요. 야자 하고 집 오면 11시, 씻고 이제 좀 자려고 누우면 12시 넘어요. 올해부터는 7시 50분까지 등교해서 6시 반 일어나도 해도 너무 피곤해서 죽을 거 같아요. 체력도 많이 달리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이게 사람 사는 인생이 맞나 싶습니다.”

야자·방과후 활동 힘들어

한 학생은 학교가 멀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 데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에 버스를

잠 좀 재웁시다! 밥 좀 먹읍시다!

한다고 했다. 야자를 안 하면 생기부에 불이익이 있다거나 야자 안 하는 학생은 짤이 나쁘거나 공부를 안 한다고 비난을 하거나 눈치를 주기도 한다. 8시까지 등교해서 아침자습이나 영어듣기틀 하고 밤 10시까지 시키는 강제 야자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침 자습시간과 저녁 야자시간에 많은 친구들이 거의 핸드폰을 하거나 못 잔 잠을 자거나 노는 친구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광주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로부터 조기 등교와 강제 야자를 강요받고 있다며 15개 고등학교, 300건이 넘게 신고된 내용이다.

‘광주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이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폐지한 이후 고등학교에서 조기등교와 야자를 강요받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에 ‘광주교육 공동체의 날’을 운영해 학생들이 봉사활동,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등을 하도록 했는데, 이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도 많아 자치활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다. 하지만 학교의 현실은 학생들의 자율과 선택권을 없고, 조기 등교와 야자를 강요하는 강제와 이를 따르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초(4~6), 중·고등학생은 평일에 평균 7.2시간의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5.8시간의 잠을 자며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경

우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또 아동·청소년의 52.4%는 ‘현재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미국 수면재단이 권장하는 적정 수면시간은 6~13세 초등학생 9~11시간, 14~17세 중학생 8~10시간, 18~25세 고등학생·대학생 7~9시간이다. 수면은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위하여 신체와 정신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인간에게 필수적인 활동이다. 수면시간은 정신건강에도 매우 중요한데 수면이 부족하면 우울감과 불안도 증가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건강한 수면이 필요하지만 학업스트레스와 이른 등교시간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수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자기 삶 결정 자율권 필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청소년의 우울·스트레스가 증가해 정신건강을 위해 ‘등교 시간 늦추기’를 시행하고 있다. 등교시간을 2시간 이상 늦추되 하교시간은 변동이 없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이른 등교시간이 청소년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2014년 미국소아과학회는 청소년의 수면 리듬을 고려할 때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이 좋고,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은 우울증, 약물 복용, 학업 실패와 이어져 있다고 했다.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 했다. 잘 자야 건강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잠을 잘 권리, 수면권을 보장하고, 아침식사로 건강을 챙기고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줘야 한다. 학생이 절규합니다. “강제 조기등교, 강제 방과후활동, 강제 야자. 제발 살려주세요! 몸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가뭄 극복 통합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책인 4대강 보를 활용한 ‘물그릇론’은 현재의 가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환경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현재 실질적 가뭄 피해지역은 4대강 본류와 떨어진 곳이기도 도수관로 등 기반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물그릇에 물을 가뭄까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흐르지 못하는 상태의 영산강에서는 간, 뇌, 생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실상을 모르는 대책인지 드러난다.

전남은 대표적인 친환경농산물의 메카로 전국에서 소비하고 있는 상당량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 시민 친화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도수터널 및 용수간선 구조물화 사업을 통해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하나의 예로,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임에도 혁신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관리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실시간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누수 등 위급상황을 수시로 체크, 수자원 변동에 대응하고 있으며 강과 바

다 사이에 높이 28m, 9개의 수문이 설치되어 있고 수문을 개폐해 수위를 조절, 만조 시에 물을 방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7개의 대형 펌프시설이 물을 빨아들일 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또한, 물 재활용 및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위해 ‘뉴 워터’를 설치, 2000년 5월부터 현재까지 4개의 뉴 워터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동시에 싱가포르 수자원 공사인 PBU (Public Utilities Board)는 빗물집수(20%), 말레이시아 협정에 따른 물공급(40%), 하수처리수재이용(30%), 해수담수화(10%) 등을 통한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의 기후나 토양 등,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악조건을 자체적인 싱가포르의 특색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실행해 싱가포르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휴양지의 역할도 톡톡히 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싱가포르 전체 도시개발의 전환점을 이뤘다.

광주·전남도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춰 물과 관련해서도 향후 이행해 나가야 할 마스터플랜을 수립, 그 방향성을 토대로 환경수질 관리 및 수생태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물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정책사례 등의 공유 및 논의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물부족으로 인한 가뭄극복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불순한 회복을 위한 ‘스마트워터 시티’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고



한형철

나주시의원

지난 4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은 4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댐과 저수지가 메말라가, 일부 도서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가뭄에 의한 피해를 받았다. 다행히 5월 초에 내린 비로 가뭄 위기가 벗어났지만, 언제 또다시 최악의 가뭄 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최근 1년 전국 누적 강수량(1167.4mm)은 평년의 87.9%이지만, 남부지방 누적 강수량(963.3mm)은 평년의 71.8%로 일부지역에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3.6%로 평년(78.2%)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남은 56.5%로 다소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등 가뭄에 의한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대책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4대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가뭄대

특지방장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규준수 운행이 필수적이다. 그 법규 중에서도 안전거리 확보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된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 정도를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에서는 주행도로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를 안전거리라고 한다.

운전을 하다 보면 불의의 상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 각종 동물 등이 도로에 나타나 피할 때, 사람의 무단횡단 시, 교통사고 예방 시 등 급정차를 해야 될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다.

운전 시 안전거리 확보 필수

이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게 되면 충돌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안전거리 확보 운전으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진병진 여성경찰서 생활안전계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군공항 쌍둥이법 시행령 차이 해소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초과되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이주 정착지원금 등 이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포함됐다고 한다. 이전 대상 지자체인 경북도는 이런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산업 물류단지 등의 사업들이 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포함되도록 건의한다는 소식이다.

헌데 쌍둥이법으로 일컬어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은 어떤가. 정부 재정지원과 관련해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해 군 공항 중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것이 좋전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다시 말해 광주시가 부지 가치를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려면 아파트 등 수익사업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 공익·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독소조항은 대구·경북 시행령에는 들어가

지 않았다고 한다.

광주 특별법 시행령에는 또 중전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 방향 등이 명시돼 있는 반면 군공항이 옮겨가게 될 이전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무하다. 군·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동시에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전남도는 시행령 보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고, 그래야 주민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싸고 이처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광주와 대구 시행령 차이가 크게 나다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행령을 보완해 원활한 군 공항 이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광주와 대구 군공항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된 것지만 지원하는 방안이 확연히 다르다면 정부를 향한 원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구 특별법 시행령을 견줘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 잇속 챙긴 전남도청 공무원들, 공복인가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도민의 혈세로 개인 용품을 사들인 공무원들이 대거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개월간 분청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해 총 50명이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이중 횡령액이 200만원 이상인 6명을 전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10명은 중징계를, 4명은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액수가 경미한 30명은 훈계 조치토록 하고 사무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서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감사에 적발된 상당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점이 개설한 소품물 계정을 이용해 공용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적 물품을 끼워 넣어 착복했다. 이들이 혈세로 사들인 물품은 상품권을 비롯, 스마트워치, 휴대용 청소기와 삼푸 등 310만원 상당을 구매

하는가 하면 구두 등 6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팀 직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지역 언론의 보도로 사무관리비 횡령 이후 불거진 이후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사실상 전남도청 전 부서가 사무용품 구입을 핑계로 허위견적서를 첨부해 사무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세금을 개인 주머니 찔뚫듯처럼 쓴 것으로, 이들의 도를 넘어선 도덕적 해이는 지역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전남도 자체 감사와는 별개로 경찰이 지난 5년 동안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있어 횡령 규모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능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부랴부랴 김영록 지사가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을 숙역지만 만시지탄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도민들은 참담하다. 제 잇속만을 챙기기 급급했던 전남도청 공무원들을 어찌 도민의 공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전남도청 공직자들의 처절한 자기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청소년 마약 위험 지역사회 도움 필요

특지방장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특지방장

과거 우리나라는 UN에서 정한 마약 청정국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음료에 대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연일 보도되는 마약 밀반입에 관한 기사를 보면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 2,387명으로, 2018년 8,107명보다 53% 증가했다. 여기서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경우는 3,092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4명 중 1명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있는 셈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휴대전화기 안에서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만큼 마약 거래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마약의 궤고는 뇌의 도파민 체계를 망가뜨려

중독을 유도하고 그로 인한 우울감, 신체 경련 등이 발생해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과도하게 투약하거나 투약을 지속하게 되면 결국 정신병이나 사망으로 한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는 위험한 약물로 호기심이 많고 신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더욱더 경계심을 갖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 접하는 마약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족이나 학교, 국가기관 등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전국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시설로 지정된 곳은 21곳으로 이 중 광주·전남권 지정 병원은 광주시립정신병원과 국립 나주병원 2곳으로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치료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마약 예방과 관련된 관계기관은 청소년들이 마약 사용을 예방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청소년들이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을 시작하게 된 청소년들은 각종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인 만큼 마약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존의 술과 담배 등 유해 약물 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마약 범죄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